

투데이 칼럼

진정 무엇이 원전을 더욱 위험하게 하는가?

국민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위험한 문명의 이기(利器)인 원전과 함께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동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원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위험하다 생각하는 걸까.

원전을 더욱 위험하게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저변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원전을 한 집단의, 한 지역의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원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더욱 두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 독점 의식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며, 안전에 있어 음지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의 대표적 결과물은 2012년 짝퉁 원전부품 공급 사건이라고 본다.

사소한 일을 방치하다 보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입해 보면 그 당시 대규모 방사는 사고가 일어날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소나마 일찍 발견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천 우신조고 천만다행이다.



전 민 중
고창군재난안전과 원전팀팀장

원전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지역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는다.

달리 말하면 어느 한 집단, 한 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정부 시절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원전을 독점 내지 사유화했던 대표적 유형을 나열하면 아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원전 전문가 집단의 원전 독점 소유다.

전문가만이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미명 하에 원전을 독점하였다. 오죽이나 폐해가 심했으면 '원전 파피야'라는 호칭을 얻었을 것이다.

둘째, 원전소제지의 원전 독점 소유다.

원전소제지에서는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그들만의 것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짙다.

물론 원전 소제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을 통해 원전 소제지가 모든 피해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며 착각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안다.

이로 인한 폐해의 한 예를 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자 원시설체 개정(안)관련 전국 시·군·구 의견조회에서 원전 소제지 정부가 반대하였다.

현재 비소제지 지자체는 방재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이 원전 소제지 지역에 의해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중앙부처의 원전 독점이다. 과거 중앙부처는 원전진흥정책 주

진이라는 명분 아래 원전을 개인 소유물인 양 취급하였다.

원전 소제지와 비소제지로 양분해 놓고 각종 논의에서 비 소제지를 배제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원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 특히 원전 주변 여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공유물이란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중앙부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준비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핵심철학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과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시 '원전 독점'라는 적폐가 되살아나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5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된다.

남은 한해 원전 독점 적폐에 대한 철저한 청산으로 국민들의 마음 속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제언

성범죄 예방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최근 경찰의 힘만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점점 범죄 양상이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는 데다 기동력까지 갖추고 있어 경찰력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개발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참여식 치안안전 앱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국민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경찰과 국민이 함께 협력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범죄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긴급제보, 현상수배 목격자 제보 등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또한 익명 제보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 분들도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고 익명여부와 제보내용을 입력 후 제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는 '여성 불안신고' 코너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생활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나 특정 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코너로, 경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범죄에 취약한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제보가 많이 이용되어 진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물론, 범죄도 많이 예방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잊지마세요. 어린이가 먼저!

경찰에서는 개화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을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구역(Core-Zone)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화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수단인 스쿨존·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중점관리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와 관계기관 및 협력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어린이(학부모) 안전교육·홍보 및 단속강화로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근절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목적이 있다.

매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는 '13년 6명에서' '15년 8명, '17년 8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어린이 교통사고는 평균 455건이 발생하고, 그중 스쿨존에서 19.6%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등교시간대 '차 없는 거리' 등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시행과 어린이 안전파찰용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내실화, 어린이 안전중심 캠페인 추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인 어린이에 대하여 '내 딸, 내 아들'이다는 신념으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전주수진인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는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전북도에 할 말이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겠다. 지역 경제가 죽으면 함께 죽고 지역 경제가 살면 함께 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아니할 말로 전북도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전북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 그 몸 던지기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전북도가 이번에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 규모와 액수가 주목의 대상이다. 군산 조선업의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긴급 경영자금으로 6백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저리융자 전환보증을 위해 1천 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코끼리 비스킷이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에겐 역력이 있다면 더 많은 액수의 자금을 풀어야 한다. 도움이 골고루 필요한 게 지역 기업들의 현실이니까 말이다. 전북도가 어렵사리 1천6백억 원을 마련한 게 고맙기는 하지만 지금은 감사를 표시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다들 생각이 복잡할 터이다.

전북도가 잘 알고 있으려나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때,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잖아도 청년 인구의 유출이 계속 되고 마땅인데 지역에 약재가 거듭되고 있으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그동안 전북의 자존을 말하고, 전북의 재능 찾기를 말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은 게 있다. 전북도가 지금 지역 경제를 위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떨치고 일어나야 맞는 데 그게 아니라 말이다. 군산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천명했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맞다. 1천6백억 투입에 대해 마뜩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주저하고 있는대로 우리 지역의 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지난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지역은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했고, 재작년 경제성장률 0%도 전북이 유일했다. 그리고 지난해의 사정도 역시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북도는 숨이 가빠 거듭 몸부림치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전북도가 예전보다 더 큰 관심과 더 큰 애정과 더 큰 희생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뭔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전북형 일자리 준비하고 있어야

날이면 날마다 폭발적인 뉴스로 한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거물급 인사들이 썰매 아래로 잇따라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는 이에 따라서 놀라운 충격일 수도 있고 용기 있는 우상파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미투 교란에 쏠려 있는 지금이다. 그래도 전북도는 생각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했다. 본보가 반복해 말했던대로 지역의 발전 방향에 시선을 고정시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저변에 몰아보았던 것을 다시 돌아보려고 한다. 정부의 지역형 일자리 방침과 관련해 착실히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변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다. 도지사님 각 실국장님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만들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을 말하고, '지역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책'과 '청년내일일자리제움공제'도입을 말한 게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려선 안 된다. 전북도는 정인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말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계속해서 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지만 젊은이들로부터 불륜 소리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전북도가 여러 번 말했던 바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광역 시도들도 자기 지역 쪽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져 가려고 할 것이기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이 전북도에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역에 맞는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다. 도지사님 각 실국장님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만들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을 말하고, '지역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책'과 '청년내일일자리제움공제'도입을 말한 게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다시 성공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